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태와 2018년 전망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tim@kinu.or.kr

I. 들어가는 말

2017년 북한시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북한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는 견해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미리 예상하여 나름대로 주요 물자의 비축량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시장의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시장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어지간한 외부 충격에는 견딜 수 있게 내성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북한에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체계하에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 규모와 영역이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일명 ‘돈주(붉은 자본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민생부문은 예외로 하고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오히려 북한의 상품 수출이 중단되면서 석탄과 수산물과 같은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북한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제재효과가 북한시장에서 가시적으로 관찰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부과되었다. 4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 등의 독자제재까지 고려하면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현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시장의 물가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북한시장은 예상과는 달리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북한 당국의 위기대처 능력, 시장의 충격흡수 역량, 민생부문의 예외적 적용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북한시장에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제재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원인들이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이 조치들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2018년 1월 초부터 중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북한시장의 상황은 2017년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관리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시장에 대한 충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II. 북한의 시장 가격: 대북 제재와의 관계

1. 유엔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후속 조치

가. 2017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17년 북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5차 핵실험(2016. 9. 9)에 대응한 결의안 제2321호 채택(2016. 11. 30)부터라고 할 수 있다.¹⁾ 이전에 비해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제재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연간 4억달러 또는 750만톤으로 설정하고, 은·동·아연·니켈 등의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이 많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이들의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도 4차례에 달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의 중거리급

1)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2. 1.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제2356호(2017. 3. 2)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2017. 7. 4, 7. 28)에 대한 결의안 2371호(2017. 8. 5)²⁾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들인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연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석탄에 이어 수산물의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이번 제재안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 기업과의 신규 합작투자 금지 및 기존의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력의 추가적인(신규) 해외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을 기회가 감소함으로써 시장의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2017. 9. 3)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2017. 9. 11)하였으며,³⁾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⁴⁾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해외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를 금지시킴으로써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원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 공급의 제한은 북한시장의 이동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섬유 수출의 전면 금지는 대규모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북한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화성-15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2017. 11. 29)에 대응하여 안보리 대북결의안 2397호가 채택(2017. 12. 22)되었다. 여기에는 유류 공급 차단, 정유제품 공급량을 50만배럴로 대폭 축소, 원유 공급 한도 400만배럴로 명시,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추가 도발 시 유류 공급 추가 제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 2년 이내 송환(기존에는 신규 고용과 계약 연장 금지), 산업기계·운송수단·금속류 대북수출 차단, 식용품·농산품·기계류·목재류 대북수입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부과되었으며, 북한경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부자재와 설비 및 장비의 대북수출이 금지되

2) 외교부(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7. 8. 6.

3) 「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 공급 30% 차단·섬유 수출 전면금지」, 2017. 9. 12.

4)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차단, 대북 원유 수출을 년 400만배럴(기존의 평균 수출 규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정유제품 수출은 연간 450만 배럴(기존 평균 수출규모)에서 200만배럴로 상한을 설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휘발성 액체탄화수소)의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함. 이로써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약 30%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었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 조치를 제외하고는 동원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거의 다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중국의 후속 제재조치

2017년 1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부,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대북 수출금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목록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이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질산암모늄과 원심분리기, 항공·해양 관련 장비 등 핵,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

2월 8일에는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2017년 제12호 공고>를 발표하고, 상무부와 해관총서(우리의 관세청에 해당되는 기관)가 공고한 ‘2016년 제81호’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까지 북한 석탄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⁶⁾ 이 조치는 유엔안보리 제재안 2321호에서 규정한 북한 석탄 수출량 상한선 조항에 따른 것이다.

8월 14일에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 <2017년 제40호 공고>를 발표하였다.⁷⁾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도문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린 조치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 철광석, 납, 납광석, 그리고 수산물 등이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품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 26억 3,440만달러의 61.7%에 해당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8월 25일에는 상무부가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하였다.⁸⁾ 이에 따르면, 향후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북한 식당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9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북한에 대해 석유정제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2017년 제52호 공고>를 발표하였다.⁹⁾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이행하기

5) 『KONASnet』, 「중국 대북수출금지 리스트 대폭 추가」, 2017. 1. 26.

6) 『연합뉴스』, 「중상무부, 내일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발표」, 2017. 2. 18.

7) 『연합뉴스』, 「중,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금수…北 수출 62%감소」, 2017. 8. 14.

8) 『연합뉴스』, 「중상무부,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투자 확대 금지 공고」, 2017. 8. 26.

위한 것으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9월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톤)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였다.¹⁰⁾

9월 28일에는 중국 내에 설립한 북한 기업들을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2018년 1월 9일까지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2017년 초반 2월에는 북한산 석탄 금수조치가 단행되었으며, 8월에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어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를 금지하였다. 9월에는 북한에 대해 석유정제제품 수출 제한과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에 이어 중국 내에서 설립된 북한 기업들을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산 석탄 수출은 2월부터 제약을 받았으며, 수산물 수출은 8월부터, 석유제품 수입과 섬유제품 수출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2. 식료품가격과 석유가격의 변화

가. 식료품가격과 대미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

북한에서 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가지표는 쌀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시장의 쌀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2017년 쌀가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5,000~6,000원(북한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¹¹⁾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17년 말로 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북한시장에서 쌀가격이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시장의 미 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8,000~8,100원 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 환율이 안정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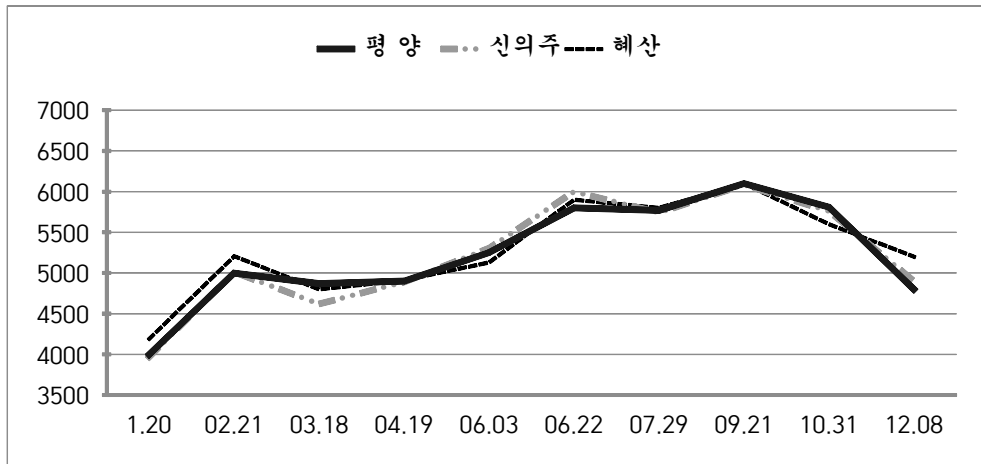
9) 「연합뉴스」, 「中, 대북 섬유제품 수출 10월부터 제한...北섬유제품 즉각 금수」, 2017. 9. 23.

10)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 금지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수속을 마치도록 했다.

11) 임강택, 「2017년 북한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2월, pp.18-23. 여기에서 쌀가격의 관찰 수치는 일주일 평균치이며, 좌표에 표시된 날짜는 관찰 시작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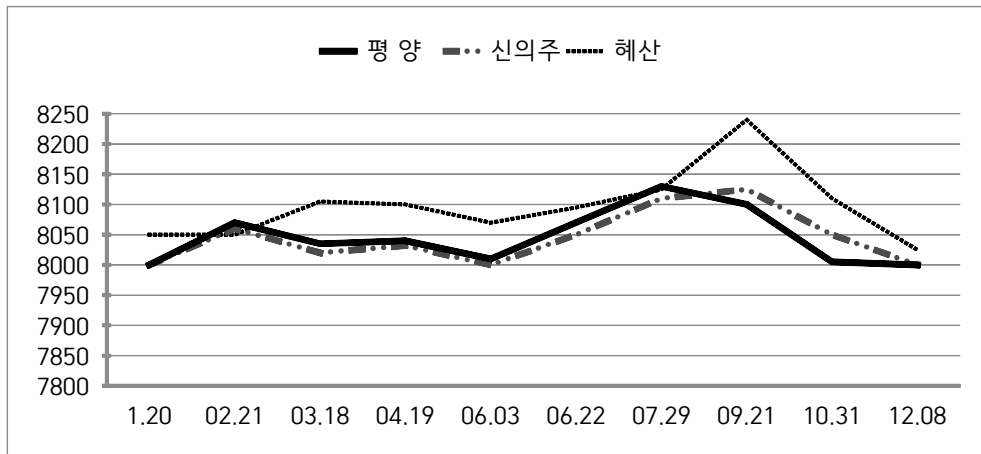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외환 부족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북한경제에서 외환거래의 일반화,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상당 수준으로 진척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외환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2017년 북한시장의 쌀가격 변화 추이



자료: Daiylnk, 北장마당동향(www.dailylnk.com, 접속일: 2018. 2. 11).

[그림 2] 2017년 북한의 시장 환율 변화 추이



자료: Daiylnk, 北장마당동향(www.dailylnk.com, 접속일: 2018. 2. 11).

나. 석유류 제품가격의 변화 추이

2017년 북한시장에서 눈에 띄게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석유류라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국제사회의 유류 관련 제재가 본격화된 9월 이전인 4월부터 휘발유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5월 10일 현재 양강도와 함경북도 내 도시의 유류 시장가격은 휘발유 1리터에 평균 1만 8천원, 경유는 1만 2천원이다.¹²⁾ 이는 3월 10일 가격인 1리터당 6천원에 비해 3배나 급등한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유류분야 제재에 대비한 북한 당국이 선제적으로 유류 사용량을 줄이고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가 유류 시장가격을 급등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5월 이후 북한의 유류 시장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9월 유류 공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채택된 이후 급등과 급락으로 불안정한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유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유류가격은 10월 말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12월까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¹³⁾

[표 1] 2017년 북한의 유류가격 변화 추이

조사 시기	휘발유	디젤유	조사 장소
2017년 2월말	6,000원/1L	-	함경북도
2017. 05. 10.	18,000원/1L	12,000원/1L	양강도/함경북도
2017. 05. 31.	16,000원/1kg (22,000원/1L)	9,000~10,000원/1kg	-
2017. 09. 18.	18,750원/1kg	12,500원/1kg	-
2017. 10. 06.	17,000원/1kg	10,000원/1kg	-
2017. 10. 25.	21,780원/1kg	15,700원/1kg	-
2017. 11. 16.	18,450원/1kg	9,840원/1kg	평양시/양강도
2017. 12. 01.	15,990원/1kg	6,765원/1kg	양강도
2018년 1월초	26,000원/1kg	17,000원/1kg	양강도/함경북도

자료: 「RFA」, 「북 기름값 상승세 주춤, 큰 폭으로 떨어져」 2017. 11. 18., 이외에도 2017. 3. 6, 5. 13, 6. 3, 12. 2, 2018. 1. 9. 등의 기사를 종합하여 작성함.

12) 「RFA」, 「북 북부 지방, 휘발유·경유값 급등」, 2017. 5. 13. 평양에서는 4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주유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3) 그러나 2018년 초 또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소결: 북한에서 경제제재와 시장가격의 관계

경제제재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품목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수출품보다 수입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¹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시장 거래에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결의안 2397호의 채택(2017. 12. 22)에 따라서 산업기계·운송수단·금속류의 대북수출이 중단되고, 북한의 식용품·농산품·기계류·목재류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제재조치는 북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생산과 공급 능력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구매 능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경로로 최근 20년 가까이 시장을 통해서 구축되었던 북한경제의 확대재생산 구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18년부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력자강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료·연료·설비 등을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석탄, 수산물, 섬유류의 수출을 중단시키는 제재조치는 북한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물품 공급 능력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에서 석탄 수출은 계획부문이나 당과 군과 같은 권력기관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출 금액과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이 많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당장 석탄의 수출이 중단되면 생산량의 일부가 북한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석탄의 시장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탄 생산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해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석탄의 수출금지 조치가 북한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고 증가로 생산은 감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감소 등을 초래하여 시장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4) 그 중에서도 휘발유와 중유처럼 대체하기 힘든 품목의 경우에는 바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섬유류 수출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석탄의 수출금지 조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섬유류 생산의 대부분은 임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문이 중단되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부 수요를 겨냥한 생산활동도 가능하겠지만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섬유류의 수출금지 조치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시장경제의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산물 수출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섬유류 보다는 석탄의 수출금지 조치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 재고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시장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고,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북한시장의 제재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제재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품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장·단기적으로 종합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2017년 한 해 북한시장에서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료품 가격이 안정세를 취한다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재의 시장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III. 2017년 북한시장에서 발견되는 변화

1. 새로운 시장활동의 등장

북한의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는가 하면 국영기업들이 시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2017년 북한 당국은 각종 공공서비스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식 등으로 재정을 보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 자동차 관련 영업활동 급증

북한에서 차량운행이 빠르게 증가하여 이와 관련한 영업활동이 새롭게 생겨나는가 하면, 예외적인 현상들이 일반화되는 형태로 시장경제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첫 번째가 주유소와

세차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동안 주유소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를 비롯하여 주요 도로 주변에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주유소와 함께 세차장 서비스도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외부 관찰자에 따르면, 2017년 평양에만 세차장이 최소 10여 곳이 관찰되었다고 한다.¹⁶⁾ 세차장의 경우에는 2010년대 들어와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외화벌이 회사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기계세차장과 일반 돈주들이 전문 세차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손세차장이 있다고 한다. 손세차장은 세차장의 수익이 높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빠르게 증가했으며,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자 손님을 끌기 위해서 미모의 20대 여성을 세차원으로 고용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¹⁷⁾

[그림 3] 평양거리의 차량과 세차장 전경



자료: 뤼디거 프랑크 교수 기고문; 『연합뉴스』, “북한에 세차서비스, ...” 2017. 8. 25.

15) 물론 최근에는 유류제품 수입 제한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한 주유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 『연합뉴스』, 「북한에 세차서비스, 스쿠터 택시 등장...「지도부도 변화 못막아」, 2017. 8. 25.
 17) 『DailyNK』, 「北서 미모의 20대 여성이 청소해주는 ‘손세차장’ 인기, 2015. 9. 18.

주차비를 징수하는 장소가 증가하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석탄 수출을 위해 운행하던 트럭들이 식당이나 목욕탕 등의 봉사소를 이용하면서 ‘주차비’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¹⁸⁾ 운전자들이 식사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차량 부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요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주차비 형태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 역전과 식당, 주택과 인접한 도로 등에서 당국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식당 등에서 직접 징수했는데 요즘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관리인을 고용하여 시간당 100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¹⁹⁾

나.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광고·홍보 활동의 증가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함께 경제생활 수준도 향상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한 광고·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고객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택시손님을 불러 모으는 ‘몰이꾼’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실상) 개인택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인택시 업자가 채용한 일꾼들이 손님을 유치해 오도록 하고 일당을 지급한다고 한다.²⁰⁾ 개인택시가 급증하게 된 것도 시간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꾼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국영기업소가 직접 택시를 구입하여 개인택시와 경쟁하면서 택시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진 것이 ‘몰이꾼’을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마당의 여성 상인들이 곱게 치장하고 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의류 매대에서는 젊고 날씬한 여성을 활용하여 의복을 선전하기도 한다고 한다.²¹⁾

2. 공식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현재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북한의 공식시장 숫자는 482개로, 2017년 3월 436개에서 8월에는 468개로 늘어나는 등 2017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²⁾

18) 『DailyNK』, 「북한서 차부품 도난 방지 비용으로 주차비를 낸다」, 2014. 6. 9.

19) 『DailyNK』, 「北, 전기·교통 문제에 주민 세금징수 시스템 정비 中」, 2017.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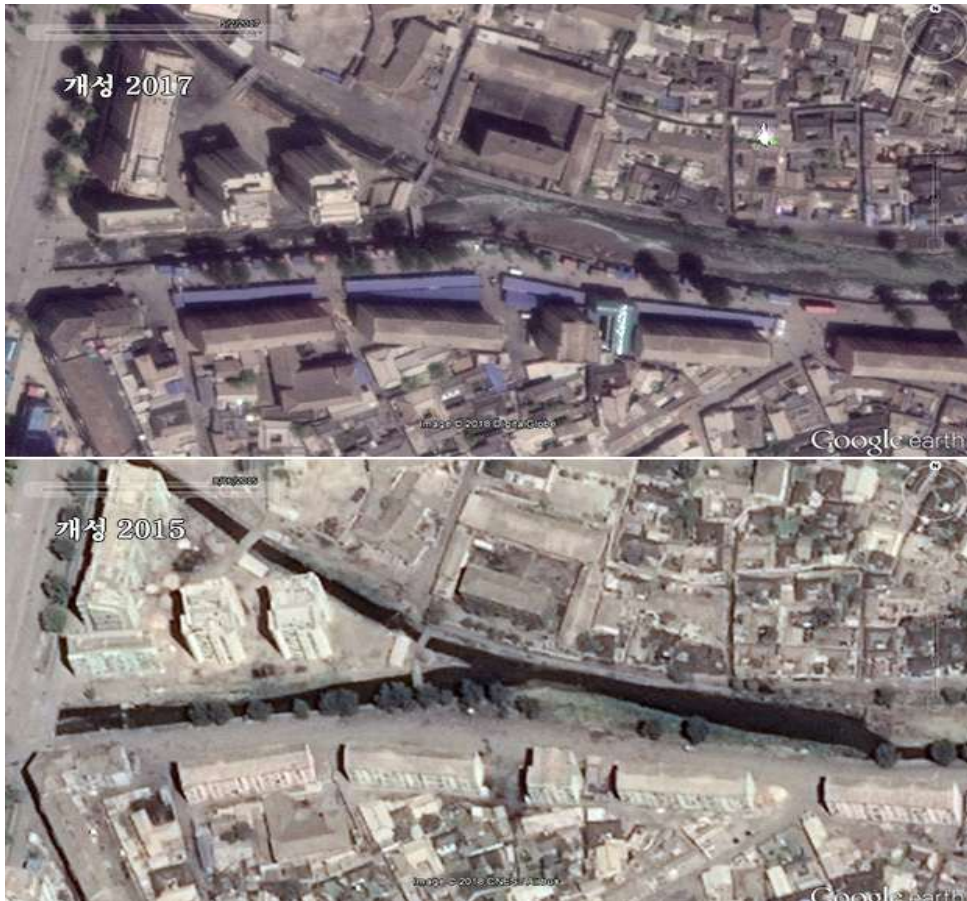
20) 『DailyNK』, 「北서 택시손님 이끄는 ‘몰이꾼’ 등장... “하루 최대 50달러 벌어”」, 2017. 11. 1.

21) 『DailyNK』, 「북한판 패션모델 등장...시장서 직접 의류 착용해 판매」, 2016. 9. 1.

지난 1년 사이에 공식시장이 대략 46개가 증가한 것이다.

북한에서 공식시장은 숫자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시장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내부 시설을 보수하여 시장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들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4] 개성시 관훈동에 새로 확장한 공식시장의 위성 사진



자료: 『RFA』, 「북 공식시장 꾸준히 증가, 480개 넘어」, 2018. 2. 3.

22) 『RFA』, 「북 공식 시장 꾸준히 증가, 480개 넘어」, 2018. 2. 3; 「북한 공식시장, 468개로 증가」, 2017. 8. 10.

3. 북한 주민들의 제재에 대한 반응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북한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의 시장은 참여 주체의 관점에서 크게 3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당국과 기업, 그리고 일반 주민 등이 그것이다. 시장활동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경제계획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역과 생산현장에서 제재효과를 절감하고 있을 북한의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의 칼날을 피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최근 북한 당국이 기업들에게 허용한 자율적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당국이나 기업과는 약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대북제재가 민생부문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제재로 인해 수출하지 못한 상품들이 짠 가격에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물과 석탄의 수출이 금지되자 국내 시장에 해당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석탄 가격은 작년 대비 1/2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²³⁾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가운데 일부 상품의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이라는 호재를 만났으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포감이 당국이나 기업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식량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말로 가면서 시장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경지역을 필두로 시장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갈수록 심화되자 일반 주민들도 점차 피부로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으로는, 2017년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자 북한 주민들 속에서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⁴⁾ 북한 주민들의 반중정서가 증가하는 데에는 북한 당국의 부추김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대북제재로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의 배신 때문”이라고 중국을 비난하는 주민교양과 중국을 비방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다.

23) 『RFA』, 「북한 석탄가격 작년의 반 토막」, 2017. 12. 13; 「대북제재로 북한 시장에 수산물 급증」, 2017. 12. 19.

24) 『RFA』, 「주민들 반중감정 확산」, 2017. 10. 9.

25) 『RFA』, 「북, 주민들에 반중감정 고취」, 2018. 1. 4; 「북, 경제제재가 중국 탓이라고 강조」, 2018. 1. 22.

IV. 2018년도 북한시장 전망

1. 북한시장의 예상되는 반응

현재의 대북제재 강도가 2018년 내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외경제관계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과의 거래가 거의 단절되어 민생부문에 해당되는 물품 정도만 거래가 허용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 대부분이 막히게 되고, 원유를 제외한 원부자재와 설비 대부분의 수입도 금지된 상태에서 북한경제는 점차 활력이 고갈되는 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당국은 당분간은 재고물량이나 비축분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리 오랫동안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산업분야의 생산과 공급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경제의 물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공급량 감소와 구매력 하락이 상승작용을 한 결과로 시장 경기의 침체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물가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품의 공급 감소보다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가 더 크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품의 생산 감소 속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물가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18년 북한시장은 경기침체 현상과 더불어 제재에 민감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보호막이 없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고통이 가장 극심할 가능성이 있다.

2.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 전망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어떤 외풍에도 견딜 수 있는 자립적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산화와 물자절약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공업 분야의 정상화와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식량부문의 증산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력을 동원하여 쌀가격 등 주요 상품의 가격 상승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⁶⁾ 하지만 시장의 ‘실제 유통가격’이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과 격차가 클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국영기업들의 제재 상황에 대한 대응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존의 무역 거래가 막힌 무역 회사들은 기업 차원의 실적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입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민생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농산물과 생필품을 수입하여 북한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존의 이러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해 온 일반 주민들, 특히 폐기발에 의지하여 생활해 온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종합하면, 강화된 제재 하에서 북한 당국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은 자칫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소결: 북한시장의 비중 증대

2018년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전반의 침체 현상은 시장 경기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공식경제부문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시장도 침체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부문의 시장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 최근 기업소·협동농장에 대한 자율성이 제도적으

26) 『RFA』, 「북 당국 시장 쌀값 인상, 담합 통제」, 2017. 12. 11.

27) 『RFA』, 「북 당국, 무차별 농산물·생필품 수입으로 주민 생계 위협」, 2017. 11. 14.

로 강화된 부분과 결합하여 북한의 시장화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제도화되고 있는 기업소의 경영상 자율권 확대는 생산품목과 거래가격, 그리고 대외무역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도가 도입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상의 자율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 공간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고, 이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장마당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시장이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의 시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를 다시 한번 시련으로 내몰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시장이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의 미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북한 당국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시장은 대북제재에도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의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북한시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는 “앞으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시장은 변화하게 될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3대 주체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 기업소와 협동농장, 일반 주민이 그것이다. 이들이 제재로 인해 느끼는 충격의 성격과 강도가 다르고, 선택지에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반응하는 양상도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반응들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북한시장의 집약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 예를 들면, 가격- 선택에 있어서도 품목별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품목과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품목들을 구별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상품목들의 성격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로 활용되었던 쌀가격의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중요시하는 가격지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의 시장가격과 그것을 중간재로 이용해 생산되는 품목의 가격, 또는 그 품목의 대체재 가격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로 시장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일반 주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온 북한 주민들은 저소득층 일수록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재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피해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엔안보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임강택, 「2017년 북한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2월, pp.18~23.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2. 1.

_____,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7. 8. 6.

<언론 보도>

『연합뉴스』, 2017. 2. 18; 2017. 5.13; 2017. 8. 14; 2017. 8. 25; 2017. 8. 26; 2017. 9. 12.

『DailyNK』, 2014. 6. 9; 2016. 9. 1; 2015. 9. 18; 2017. 9. 23; 2017. 10. 31; 2017. 11. 1.

『KONASnet』, 2017. 1. 26.

『RFA』, 2017. 8. 10; 2017. 10. 9; 2017. 11. 14; 2017. 12. 11; 2017. 12. 13; 2017. 12. 19; 2018. 1. 22.